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

미국의 도청과
기밀문서 유출 파장
2~3면

윤석열의 친미는 대기업 위해
노동자·서민 내치는 것
4면

삼성전자 감산 선언과
한국 경제
5면

국익 같은 것은 없다
6~7면

프랑스 반란
8면

대통령실이 부인해도 미국의 도청은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의 사병 체포가 자인이고 방증이다



〈노동자 연대〉 정규 호(456호)에는 특별 호외에 실리지 않은 기사들이 더 있습니다.

-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과 표현의 자유
-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미국 기밀문서 유출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기밀문서들에는 러시아는 물론 동맹국 정부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분 도청 등 스파이 행위로 얻은 것들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등의 스파이 행위를 문제 삼아 왔다. 그래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퇴출시켰고,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감시 도구'라며 틱톡을 금지하라고 성화였다.

지난달에 바이든은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는" 스파이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미국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었다.

사실,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질과 양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왔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하고 독일 총리 메르켈 등 주요국 정상들의 통화 내용까지 도청해 왔음이 2013년에 폭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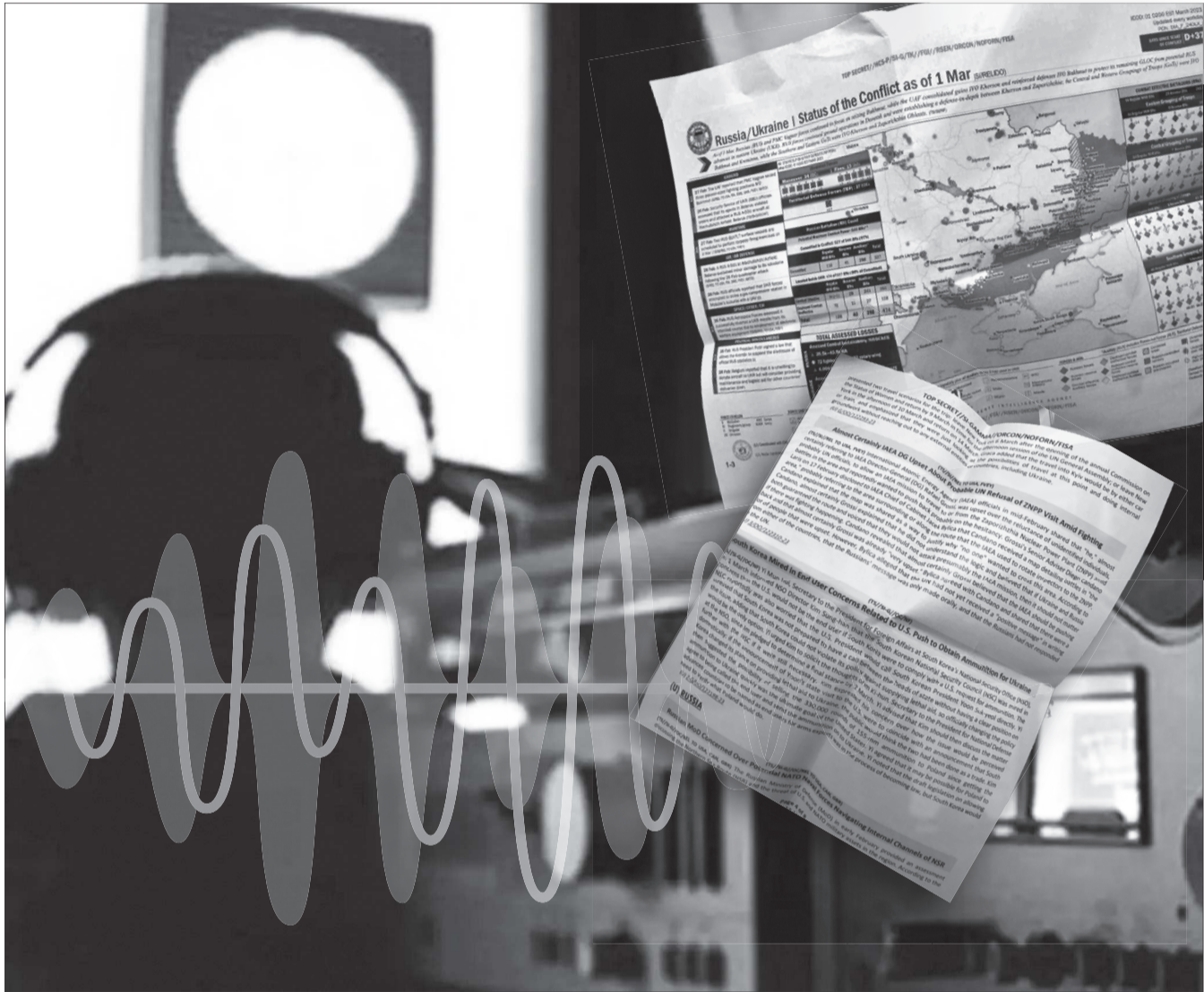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동맹국 지도자들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스파이 행위를 벌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동맹이더라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적과 친구를 가리지 않고 더 활발하게 벌어졌을 듯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리고 주요국 정부들이 전쟁에 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한국 정부도 청 정보, 이스라엘이 무기 지원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안,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보고 등에는 이런 사정이 반영돼 있었을 것이다.

이번 문서 유출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분열돼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운운이 모두 헛소리임을 보여 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에서 동맹국들을 좀더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엄청난 양의 스파이 행위를 벌여 왔다

윤석열 정부,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고려

이번에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도청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도 함께 폭로됐다. 거기에는 4월 윤석열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내부 논의가 정리돼 있다.

이를 보면, 당시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은 바이든이 직접 윤석열에게 전화해 무기 지원을 요청할지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외교비서관 이문희는 그 전에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자고 말한다. 이참에 적극적인 전쟁 지원을 미국에 약속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반면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은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에 생길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래서 폴란드로 포탄을 우회해서 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화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국내 여론 등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쟁 지원 요청에 되도록 응하려 애쓰고 있음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 도청 내용이 "상당 수 위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제 행동과 정황은 도청 내용이 진실에 가까움을 짐작케 한다. 미국의 다른 문서에는 한국산 155밀리미터 포탄 33만 발을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수송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도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탄약 인도와 관련해 한국과 얘기를 나눴다."

또한 4월 12일 한국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판매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7월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요구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미국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열해 가는 세계 속에서 주요국들은 “국익”을 위해 이런 일을 더 빈번하게 벌일 것이다(관련 기사 6~7면).

그렇지만 이번 문제를 주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없다. ‘주권’은 민족주의자들의 관심사이고, 한국은 미국

의 (반)식민지가 아니며, 한국인들은 미국의 억압을 받는 국민이 아니다. 이번 도청과 반도체지원법처럼 미국의 압박을 받아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게 남한의 군사적·지정학적 이익에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폭로된 내용에 담긴 한국 정부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기 지원안이 예기치 않게 폭로된 것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서방 제국주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은 곧 노골적이 될 것이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한국도 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할 공산이 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다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과 미국의 광범한 스파이 행위가 새삼 확인됐다.

유출된 문서 중에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 나토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문서들이 있다. 본지가 전부터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3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토의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 아마도

그 특수부대원들은 경찰과 우크라이나군 훈련에 관한 임무를 수행해 왔을 공산이 크다.

나토의 군사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금세 무력해졌을 것이다. 특히, 한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공세 계획을 다루는데,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 부대 어디에 언제 배치될지가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공세를 위해 편성되는 12개 여단 중 9개 여단이 미국 등 나토의 무장과 훈련 지원을 받고 있다고도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 9개 여단에 필요한 장비에는 250대 이상의 전차, 350대 이상의 기계화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가령 우크라이나 82여단은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 영국 챌린저 전차, 독일 보병 전투 차량 등 150여 대로 무장된다. 이 부대는 공세에 투입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33여단의 경우,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32대와 미군 전술 차량 90대를 받게 될 것이다.

소모전

다른 문서를 보면,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18만 5900~22만 3000여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파괴된 나토군사시설 (관련 기사)

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그 규모는 12만 4500~13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두고 격돌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이 소모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 기밀문서에는 올해 안에 평화협상이 열리지 않고 소모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분석도 들어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 즉 경쟁자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이 냉혈한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비밀리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영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알면서도 항공모함 1척을 인도-태평양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갈등과 얽히며 위험을 키우는 양상이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더 커져야 한다.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유지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듯하다.

윤석열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먼저 이행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 생각이었던 듯하다.

윤석열은 4월 5일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윤석열은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언급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모두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의존해 풀어야 할 경제 문제들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 목록에 올려야 할 쟁점들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심지어 일본마저)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바라는 명시적 보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해 보이는 이 거래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치면서까지 한일 군사 협력을 복원한 것도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은 늘고 있다. 미국에 도청을 당했는데도 윤석열이 미국에 항의하지 않는 것이 더욱 그런 견해에 힘을 실는 듯하다.

상호 이익 동맹

그러나 이런 양상은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은 일방적 수혜자도, 일방적 수탈자도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듯이, 한국 지배계급도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



한·미 지배자 모두에 맞서야 한다

를 중심으로 판단·선택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협력만 한 게 아니라 상호 무역 분쟁을 겪었고, 북한·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로 불신과 갈등도 겪어 왔다.

지금 한국 정부가 지정학적 미·중 갈등에서 미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배경이 돼 온 한미동맹과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가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에 더 이롭다고 보고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도 지금 동맹을 경제적으로 배려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금융 위기에서 보듯 미국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바이든 정부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이번 도청 건도 미국의 동맹 포섭과 관리에서의 난관을 보여 준다. 사실 이 건에 대한 양국 반응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드러난다. 미국은 문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동맹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면, 미국에게 양보받고 싶은 게 많은 한국은 미국 비판에 조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한다.

한미동맹 전반부에 미국은 동맹 유지 비용을 충실히 지불했다. 냉전의 최전선 국가로서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시장 자본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잡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원조 규모는 한국 총생산의 10퍼센트(정부 예산의 40퍼센트)에 이르렀다. 미국 측 비용에는 우익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후원도 포함돼 있었다.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통치와 초차 취는 한국의 노동계급이 치른 한미동맹의 비용이었다.

이 관계는 경제적 상호 관계 변화를 겪으며 달라졌다. 1980년대 중엽부터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빚어졌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이 성장한 한국 경제를 지원 대상에서 잠재적 경쟁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국 지배계급은 두 번의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는 1997년 IMF 위기 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이고, 또 하나는 한미FTA 체결이다.

둘 다 한국 경제를 개방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제 질서에 적극 편입되기로 한 것이다. 개방은 미국 기업들에게 전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지만, 한국 지배계급은 한국 경제를 더 효율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이 희생돼야 했다. 한미FTA의 문제는 경제 '종속'이 아니라 바로 한미 두 지배계급들의 착취와 자본축적에 있었다.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적극 들어가는 것을 한국 자본가들은 당시에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불렀다. 중국 경제와 본격 통합된 것도 이때다.

상호 투자와 무역의 증대 속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은 안보 동맹과 함께 "기술 동맹"으로서 맺은 관계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이 도입한 기술의 56퍼센트가 미국산이다.

동맹의 비용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동맹 포섭에 사활을 걸면서도 동맹국들에게 가입 비용을 내라고 수전노처럼 구는 것은 (도청 건처럼) 오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의 군색한 처지 때문이기도 하다.

여야 의견 차는 여기서 비롯한다. 윤석열과 여권은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기로 한 이상, 이왕이면 어려울 때 화끈하게 돕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본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갈 방미 사절단을 꾸린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보조금 요건 완화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들은 4월 14일 미국 반도체법이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 전쟁으로 소모되는 무기를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 지원은 한국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윤석열이 표방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모습인 셈이다.

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미국의 군색을 지렛대 삼아 더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둘 모두 한국 지배계급의 독자적 이익 극대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한미동맹을 지지하면서도 실천에선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진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한미동맹을 종속 관계로 보면서 국익 개념으로 접근하면 한국 지배계급을 노동계급과 한편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는 오히려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친기업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반대를 위한 대중의 의식 발전에 해롭다.

가령 삼성반도체의 실적 부진을 두고 삼성이 미국과 윤석열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보는 시각이 그렇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의 압박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세나 노동조건 공격 등에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8년 5월 당시 대통령 김대중이 경제 위기 탈출 협상차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을 때, 당시 민주노총 지도층은 국익 외교를 지원한다며 예고된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을 취소했다. 그 대가는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의 광풍이었다.

한미동맹이나 한미FTA를 대미 종속이며 한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좌파는 이후 현실이 그와 다름을 보고 근본적 사회 변혁 전망을 상실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 지배계급이 그것을 통해 그 나름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봐야 한국 지배자들이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해 지정학적·군사적 이익을 키우려고 할 때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지배자들 모두에 맞설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과 더욱 악화되는 한국 경제

최근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퍼센트, 96퍼센트나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은 건 1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손실이 컸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 원 이상인데, 올 한 해 전체도 적자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 거품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정도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3개월 전에만 해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공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하락기에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써 왔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체 경기 악화로 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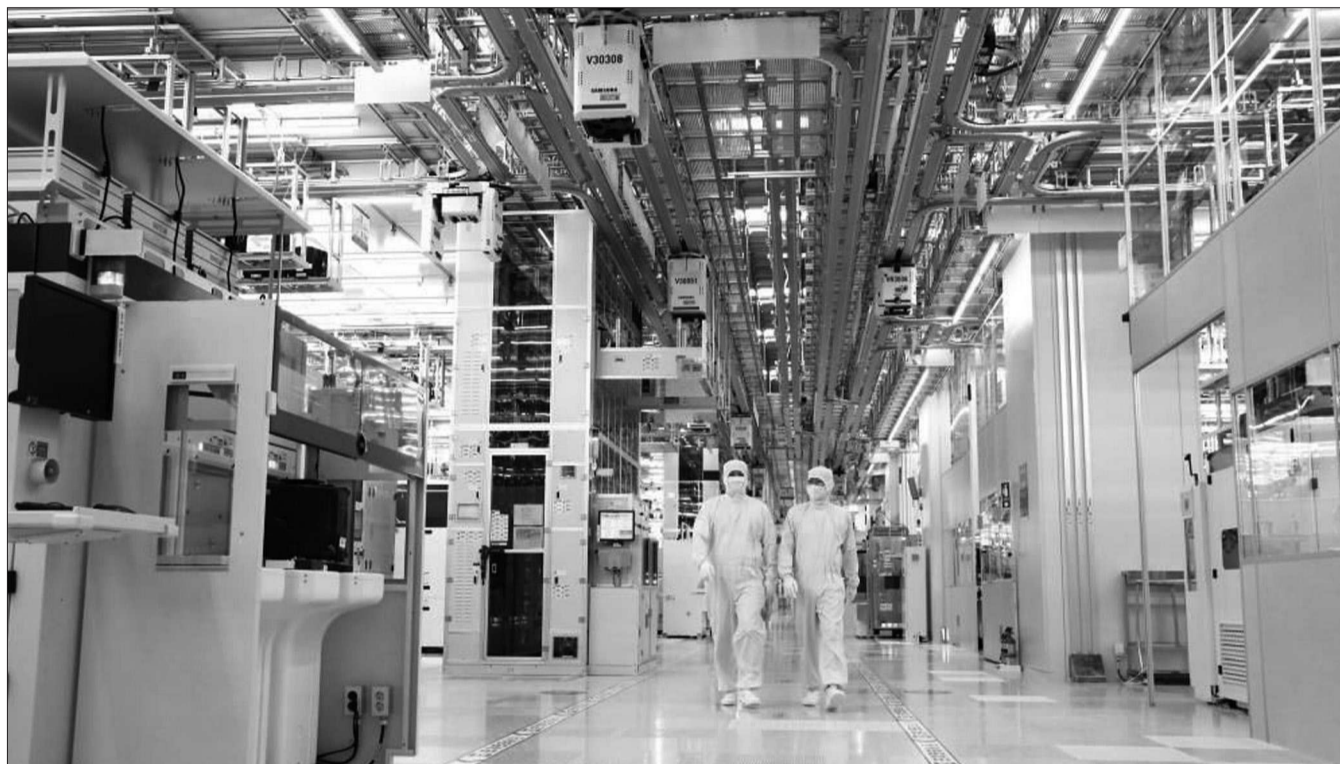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다. 1월에 42억 1000만 달러 적자로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 적자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탓이 크다. 1~2월 반도체 수출은 1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억 달러(약 40퍼센트)나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 경상수지 적자 총액보다 더 많다.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도 대폭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려면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3퍼센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특히 미국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소 은행들이 [또 다른 위기가 거론되는]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4분의 3에 달한다"며 은행 위기로 기업과 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선언은 경기 침체의 위험을 보여 준다. 여기에 미중 갈등 격화도 한국 기업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계가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을 공산이 커지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고 있다. IMF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1.5퍼센트로 또 낮췄다.

게다가 미중 갈등 격화도 한국 기업들을 난처한 처지로 몰고 있다.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조만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쟁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보안 조사를 시작했다.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막을 수도 있는 조치다.

또, 시진핑은 광저우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깜짝 방문해, 한중 간 경제 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여러 혜택을 주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 고통받는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수록 경제 분야에서도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편들어야 한다는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부동산 PF 위기

한편,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 불안정 심화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억제하게 만들어 다시 기업들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3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상장 건설회사 중 36퍼센트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규모가 꽤 큰 중견 건설회사의 부도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월에 시공능력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이어 지난달에는 에이치엔아이엔씨(133위)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대창기업(109위)도 부도를 내는 등 건설사 줄도산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보다 더 악화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 위험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부실 위험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2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37퍼센트에서 1.19퍼센트로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 35곳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0퍼센트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됐다. 지난해에 새마을금고가 해 준 부동산 PF가 급증했고, 대출 연체액도 급증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대형 저축은행 2곳이 부동산 PF 대출에서 1조 원대 손실을 봤으니 예금을 빨리 인출하라는 소문이 '지라시'를 통해 퍼진 것이다. 금융 당국과 해당 저축은행이 소문을 반박해 뱅크런 위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소문이 자꾸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증권사,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더 큰 위기와 패닉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을 추진해 기업들의 이윤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기업들과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강화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생계비 위기에 맞서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윤석열은 겉핥기만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텐데,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의 실체는 기업주들과 사용자들의 이익, 즉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윤석열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서방 제국주의에 확실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지배계급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그래서 윤석열의 행보는 재벌 등 기업주들에게서는 지지를 얻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나라 전체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것은 계급 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이다. 국가의 감시와 탄압, 군사력 축적, 전쟁 선포, 노동자 파업 파괴 등등 온갖 고약한 짓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왜 국익론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 옹호로 귀결되는가?

국익 논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한 나라 구성원이라면 모종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함을 가정한다.

그런데 노동자 파업 파괴를 명령하는 경찰 간부와 파업 중인 노동자들 사이에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 실업수당을 받는 노동자와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늘리려는 사용자들 사이에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까?

물론 국익 개념은 어느 정도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국경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 모두는 그중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내부는 계급으로 분열돼 있다. 한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다수 노동계급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서로 경쟁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자본가 계급이 있는 것이다.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수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돌아갈 이윤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주 69시간으로 연장되거나 연금이 삭감되면 기업주들의 이윤은 늘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통만 늘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서 초월해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성공과 위상,

안정적 운영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국가 관료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해야만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 경제를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로운 것이 국가와 사회에 이로운 것으로 된다.

그래서 고속 성장, 고수익, 시장 안정성 같은 기업의 목표가 곧 정부의 목표가 되고, ‘국익’은 유력한 자본가들의 이익과 동일시된다.

윤석열이 스스로 “대한민국 영입사원 1호”임을 내세우며 투자 유치에 애를 쓰는 한편, 화물연대, 대우조선 등 노동자 파업 파괴에 혈안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도 있겠지만,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려 하는 것이 윤석열 탄압의 본질을 이룬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집권 때의 민주당도 행동에 근본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 계급 분열이 있다. 그러나 국익론은 이런 분열을 가리는 구실을 한다. 지배자들은 다수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익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며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인다.

정부가 어떤 행위를 옹호하는 데 ‘국익’을 거론할 때 그것이 어느 계급의 이익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실업수당을 받는 노동자와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늘리려는 사용자들 사이에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까?

위기가 오면 국익론 이용하는 지배자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국익론은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국익론은 늘 노동계급을 공격하거나 희생을 강요하고 사회 폭대기층의 이익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었을 뿐이다.

1997~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지배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경

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살리자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제1·2차세계대전 같은 제국주의 전쟁도 ‘국익’의 이름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강 각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등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다.

국적이 무엇이든 노동자들은 전쟁을 벌이는 지배자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

좌파의 국익론은?

국익 옹호 주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좌파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가령 민주당 개혁파와 정의당 중앙, 진보당 등은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정책 등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물론 이때의 국익은 윤석열처럼 단지 지배계급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리키고, 이런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가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규탄하는 것이다.

이런 국익론은 윤석열 같은 자들이 부추기는 국익론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현 정부의 친제국주의 행보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 투쟁한다는 점에서 좌파적이다. 그럼에도 공통 이익(국익)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좌파적 민족주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버전의 국익론은 좌파적임에도 모순과 한계가 많다.

첫째, 이런 종류의 국익론이 윤석열 같은 소수의 ‘반동적 모리배’를 제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나라 구성원에게 모종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그래서 공동의 이해관계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석열의 한미일 동맹 강화 노선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

출에 해롭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이 좌파적 윤석열 비판에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 훼손에 근거한 반대는 지배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면 금세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유리한 양보를 얻어온다면 야당들의 명분은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이익을 바라는 관점으로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옹호하기 어렵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도 희생과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 취약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중의 ‘매판’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계급을 초월해 단결하자라는 좌파적 포퓰리즘(민중주의) 관점에서는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간과되고, 노동계급이 고유한 요구를 내세우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게 된다. 대신 민주당 개혁파와의 동맹 추구가 중시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의 ‘해법’에는 반대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에 관한 그들의 입장도 본질적으로 그 질서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 동맹(특히 한일 군사 동맹)에 반



좌파적 버전의 국익론도 모순과 한계가 많다

대하지만, “남한에는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 확고한 확장억제 전략”이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은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일관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행은 동행을 위해 운동의 요구와 투쟁성을 삭감하는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령 미국 제국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은 삼가라는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당시에도,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당시 명칭) 내 개혁파 의원들이 파병안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거라는 운동 내 기대가 반전 운동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파병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열우당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당시 파병 반대 여론과 행동 사이에

격차가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열우당 개혁파와의 동맹을 중시하다 운동의 모멘텀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국익론에 근거한 반대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 구축에도 해롭다.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을 편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노동계급 모두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제국주의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지배자들에 맞서는 데서 한·중·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국제적 연대로 반전 평화를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우리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관점으로는 국제적 연대를 어렵게 만들기 십상이다. 최악의 경우, 외부의 위협이 커지면(가령 중국이나 북한의 핵 위협 등)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한다면 안보력 강화를 주문하며 국제적 연대를 아예 파괴하는 데로 나아갈 위험도 있다.

▶ 8면에서 이어짐

행진을하기로 표결했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활동가들은 헌법위원회 건물 맞은 편에서 마크롱의 법안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체포했다.

오를레앙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생 트리스탕은 4월 14일에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마크롱의 친구들로 가득하다. 그들이 그 법의 극히 일부를 무로 돌릴 수는 있어도, 투쟁은 거리에서만 이길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연금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허용할지의 여부도 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한 공식 절차에 따르면, 구속력도 없는 이 국민투표가 승인되면 국회의원 18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확보된 상태다.

그런 다음에는 유권자의 10퍼센트인 487만 명이 9개월 내에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더 필요한 곳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

운동이 그런 길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운동은 노조 지도자들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간헐적인 집중 시위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힘을 꺾으려는 대통령을 물리칠 수 없었다. 4월 12일, CGT토탈 노조의 정규 노동자들은 3월 7일 시작한 무기한 파업을 끝내면서 씩씩하지만 도전적인

어조로 파업을 접는 이유를 밝혔다.

“지금 운동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면, 그것은 몇 주나 파업을 벌인 기층 노동자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적들의 야욕에 대항하는 세력 균형을 조성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월 7일부터 행동의 날을 7번 개최하는 대신에, 이 파업 일정들을 하나로 이어서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웠어야 했다. 그랬다면 운동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띄엄띄엄 행동의 날을 잡는 투쟁 방식을 결코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지를 표한다.”

그러나 정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저항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마크롱 정권이 오직 경찰과 탄압에 의해

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자신이 4년이나 되는 남은 임기를 무사히 끝낼 수 없고, 추진하려던 다른 개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싸웠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모든 이들이 전장으로 돌아갈 때 적용할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헌법위원회가 뭐라고 결정을 내리든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저항이 3개월을 지나면서 프랑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에 그치지 않는 총파업과 전투적인 거리 시위가 있었다면 마크롱은 벌써 박살났을지도 모른다.



프랑스 파업 노동자들이 마크롱을 무너뜨릴 힘을 보여 주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이며 마크롱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걸고 파업을 벌인다면 윤석열 반대 운동이 커질 수 있다.

프랑스의 언론, 정치권, 노조 간부들이 4월 14일에 있을 국가기관(헌법위원회)의 발표에 관심을 쏟는 동안, 4월 13일의 시위와 파업은 사회를 바꿀 진정한 힘을 보여 줬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맞서 1월부터 전국적 시위를 벌여 온 노동자들이 12번째로 거리에 나왔다. 이전의 몇몇 시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우 컸다.

수십만 명이 주요 도시들 전역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마크롱의 야만적 공격을 수용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참고 넘어가기"를 거부했다.

4월 13일 아침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수천 명이 의미 있게도 파리와 몇몇 도시에서 맹렬한 "비공식" 시위를 벌였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아브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끝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노조들이 투쟁을 완전히 관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4월 13일 행동의 날은 파리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해 이브리 쓰레기 소각장의 일부를 점거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시작됐다.



4월 13일 12번째 전국 행동의 날. 낭트의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리베라시옹>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많은 학생들과 다른 부문의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 재개를 지지하러 왔다. 저 멀리 소각장 지붕 위에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노동자들은 건물 상당 부분을 덮는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현수막엔 '100퍼센트 공영화/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늘려라'라고 쓰여 있다. 시위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환호하며 폭죽을 터뜨렸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신임 사무총장 소피 비네가 도착해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 파업 노동자들을 만

났다. 철도·의료·교육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파업 노동자들은 기업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소유한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다. 아르노는 프랑스로부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할 것이다. 스웨덴 철도 노조 활동가들은 LVMH 본사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깃발을 울리며 이렇게 외쳤다. "여기 돈이 있다." 신(新)생태사회민중연합(NUPES,

"뤼프")의 좌파 정치인 장뤽 멜랑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인과 노조 지도자들은 4월 14일을 13일보다 더 중시한다. 14일 헌법위원회는 마크롱이 연금법을 통과시키려고 동원한 수단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의회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다. 그러면 정부가 불신임안 표결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그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다. 그리고 정부는 불신임안 표결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나라는 "지옥이 될 것"

헌법위원회가 예상대로 마크롱의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을 승인한다 해도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대중 행동을 끝낼 태세가 돼 있다. 그러나 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분노가 크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위원회가 마크롱의 거수기 구실을 하면서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 생브리외 시(市)에서 파업 중인 한 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4월 14일에 "축제가 벌어지거나, 전쟁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동자는 연금 개혁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지옥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며 나도 함께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넵은 시위를 우려해 4월 13일 저녁부로 헌법위원회 앞 시위를 금지했다. 학생들은 14일에

▶ 7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①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4월 19일(수)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marxist-theory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